

# 경북도, 산학연 12곳 반도체 인재 양성체계 구축

### SK·한화 등 대기업 3곳과 지역 4곳·금오공대 등 참여 산업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尹 대통령 기조와도 발맞춰

경북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난다. 반도체 인프라가 잘 갖춰진 구미를 중심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등 반도체 우수인력을 키우고 영입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 지난 한 달 동안 구미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와 방위산업 업체 등을 방문해 인재 양성에 대한 구체

적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31일 구미 금오공대에서 SK실트론, 한화시스템 등 대기업(3곳), 지역 기업(4곳), 금오공대, 금오공고, 전자공고 등 모두 12개 산학협력 기관과 지역산업 기반 인재 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금오공대는 지역 기업과 함께 맞춤형 교육과정과 현장 시스템을 적용, 교육프로그램 이수 졸업생의 50%를 우선 취업시킨다.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장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북도와 구미시가 부담한다. 지역 주도 산업인재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학사 출신의 기술자들이 석·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금오공대에 관련 야간학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학비 걱정 없이 엔지니어의 꿈을 지역에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오공고와 구미전자공고도 교수와 기업 연구원이 직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기업 선 취업 후 학사 취득 시 등록금 무상 지원, 대기업 수준의 보수, 군복무 후 복귀 시 상여금 300% 지원 등 '고졸 청년기술자 전성시대'를 열어간다는 복안이다.

경북도도 대학연구소 406개, 기업연구소 1천503개와 함께 지역산업의 원천기술과 응용기술에 참여하는 특화 프로그램에 연구비를 지원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정부와 대학이 함께 손잡고 기업의 투자 단계에서 인재 양성, 규제 개혁, 정주 여건 개선 등 3개 팀을 주축으로 하는 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인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가용재원의 10% 이상을 투자하고, 서울 청년이 지방을 바라보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흐름은 양자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위스 순량과 과학자 초청 만남 등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 기술 중시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성과가 기대된다.

임성준 기자 news@imaeil.com



경북도·구미시,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금오공고, SK실트론·LIG넥스원 등 구미 반도체·방위산업 기업 관계자들이 31일 금오공대에서 '지역산업기반 인재양성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 필수의료 붕괴 없도록 '공공정책수가' 도입

### 야간 응급 수술 가산율 최고 200% 분만 안전정책수가는 100% 추가

진료 과목별 의료 인력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정부가 필수의료로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8면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응급 및 분만·소아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 등과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대책안을 이날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공공정책수는 현행 행위별 수가(의료 행위의 대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의료 분야에 적용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 체계다. 진료 빈도가 낮거나 수익이 낮은 필수 진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하며, 의료 서비스의 질·성과 등을 보상 기반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수술에 대한 수가 가산율을 현행 100%에서 150~200%로 확대하고,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

공전문의료센터'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또 분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수가', 의료사고 예방 등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현재 분만 수가에 더해 지역별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병원에는 '지역수가'를 100% 가산하며, 분만 담당 의사에게는 '안전정책수가' 100%를 추가한다.

필수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응급 의료 전달 체계를 개편한다.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가 수술을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지는 등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 진료부터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한 병원에서 가능하도록 현재 40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규모는 50~60곳 정도로 확충할 예정이다.

주요 응급 질환에 대비하고자 병원 간 순환 당직 체계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현재 질환별로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가 병원당 1, 2명에 불과한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 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야간·휴일에는 진료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지역 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순환·교대 당직 체계를 가동하고 이를 119 등과 공유한다.

허현정 기자 hhj224@imaeil.com

##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심사 속도 "임시시설 영구화 금지 조항 넣자"

### "건설 불발됐다가 떠안게 될라" 원전 소재지역 주민 거센 반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심사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임시 저장시설의 영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법에 영구 관리시설 건설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를 두고 영구 관리시설 건설이 불발될 경우 원전 내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민의힘 김명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 법률안을 심사하고 있다. 이후 3개 특별법은 법안심사소위 심사 작업이 뒤따를 전망이다.

문제는 3개 특별법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 조항이 담긴 것을 두고 원전 소재 지역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 부산 등 지역에선 "영구 관리시설 건설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건설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데다 실제 건설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며 "자칫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공청회에서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제출된 3법 안엔 새로운 법률 용어인 '부지 내 저장시설'을 제안하고 있는데 전혀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 여당 의원들도 지난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에 고준위 방폐물 저장 영구화를 차단하는 금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최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는데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원전 가동을 멈출 게 아니라면 영구 처분장,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 등을 통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가 불가피한 게 현실"이라며 "특별법 제정 시 부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의 영구화를 막는 장치는 물론 수십 년간 부지 내 저장의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할 인근 주민을 위한 과세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영채 기자 pyc@imaeil.com

## 신한울 3·4호기 연내 부지정지 공사

###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마무리

신한울 3·4호기가 올해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올진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조만간 주민 설명회도 개최한다. 산업부는 오는 6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는 현재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 의결을 마친 상태다. 산업부는 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최악의 경우와 침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추가해 평가서를 보완 제출했으며, 행안부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으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해 3분기까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연내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건설 허가를 취득해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성원 기자 seagull@imaeil.com

## FULL COLOR 전광판 & 옥상광고탑 제작전문

광고물 제작부터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한번에 모두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SERVICE** 제공

계획 · 설계 · 인허가 · 제작 · A/S



Advertise by 주식회사 메카  
문의전화 010.7600.6789